박지사 '호남고속철 초강경 발언' 왜

MB 실용정책 존중 했지만 임기말 노골적 홀대에 '폭발'

정치적 부담 무릅써 가며 영산강 살리기 사업 지지 돌아온건… F1·J프로젝트·여수엑스포 핵심 현안 국가지원 외면

호남고속철에 대한 박준영 전남지사의 강도 높은 '작심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지사는 9일 목포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정부의 호남고속철도(KTX) 광주~목포 구간 노선' 선정 문제에 대해 유례없이 직설적인 언급을 했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말을 아끼는 것으로 유명한 평소 태도와 달리 "현 정부는 손을 떼라","국가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서 되겠느냐"며 정부를 겨냥한 '폭탄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36년이면 달팽이도 갔을 시간"이라는 비유를 들면서 정면 비판하는 등 발언 수위도 평소보다 훨씬 높았다.

전남도 주변에선 전남도의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의 비협조와 무관심한 태도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분석들을 내놓았다. KTX 고속철 신선 건설을 비롯,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모터스포츠 산업 클러스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무안공항, 한·중 국제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관광투자분야 PF대출 완화·여수 엑스포 등 지역발전을 위해 절실하다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각종 현안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따른 '작심 발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F1 대회의 경우 정부는 애초 약속했던 경주장 건설 예산(312억)도 지원하지 않았고 운영비(90억)도 형평성을 들어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지 양도·양수 문제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아 경주장을 지어놓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도 비슷해 양도·양수 문제에다, 정부의 노골적인 전북 새만금 단지 지원에 휘청거리고 있다.

주력산업인 신재생에너지도 삼성의 새만금 투자 계획이 나오면서 투자자가 빠져나갈 지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수성을 감안한 관광분야 PF 대출 완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에 대한 섭섭함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남도는 그동안 현 정부의 주요 사업에 '실용적' 자세를 취해왔다. 영산강 살리기의 경우 민주당의 반대 당론과 일부 지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영산강은 다른 강과 다르다"는 논리로 뱃길 복원에 나섰고 최근에는 '운하'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까지 영암호 통선문(通船門) 설치를 추진해왔는데 정부는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다.

급기야 복선화에만 36년을 끌어'눈물의 호남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호남 차별의 상징인 호남선에 대해서도 '신선 건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게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박 지사가 작심한 듯 보여진다. 단순한 '입장 표명'이상이어서 공세의 의지가 읽힌다.

일각에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속철 노선이 아직 공식 확정된 바 없는 만큼 정부에 대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지역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중이며 건의하고 있다"면서 "사업을 '스톱'하라거나 소송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보온병' 깨지는 소리들 하고 있다

싹이 트지 않는 '불량볍씨' 호품 벼로 인해 벼 재배 농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광주 광산구 용봉동 이상주(57)씨 비닐하우스에서 농민들이 제대로 발아되지 않은 벼 모종판을 엎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불량 볍씨' 분노한 농민들

보급종자 운광·찰벼 등도 싹 안터 올 농사 망칠 위기 모판 뒤엎고 정부 대책 촉구

농자재 값 줄인상에 이어 채소값 폭락, 싹이 트지 않는 '불량 볍씨' 파동으로 인해 올해 농사를 망칠 위기에 처한 농민들이 배추밭을 갈아엎고 모판을 엎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불량 볍씨'가 호품벼 뿐만 아니라 운광벼, 온누리, 찰벼 등 다양한 정부 보급 종자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신속한 종자 확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합, 광주시 농민회는 9일 전남도청 앞과 광주시 서구 세하동 문촌마을과 광산구 용봉동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채소값 폭락 대책 마련과 불량 벼 종자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특히 농민단체와 농민들은 이날 오후 광산구 용봉마을 이상주(57)씨의 비닐하우스에서 모판 620개를 모두 엎어 버리고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620개의 모판은 농지 2만3760㎡에 심을 수 있는 양이다.

이씨는 "정부에서 불량 볍씨를 보급하는 바람에 모가 자라지 않아 벼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라며 "신속히 종자를 확보해 다시 보급하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농민회 이갑성 정책실장은 "모판은 1년 농사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며 "보상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지어야 하므로 대체 종자 보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어 "종자 소독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정부는 모든 종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라며 "모내기를 끝내고 구체적인 보상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민회 광주·전남 연맹은 이날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농수축산물 가격 폭락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이날 오후에는 광산구 문촌마을에서 김동선(64)씨가 재배한 봄 배추 4만여 포기를 갈아엎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도시공사, U대회 선수촌 참여

공공관리자 명시… 조합·현대건설 등 13일 3자협약

광주시는 9일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을 위해 광주도시공사, 화정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현대건설 등이 오는 13일 3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3자 협약은 광주시의회에서 최근 가결된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 지원 동의안'에 명시된 현금청산 가구 중 10%를 초과해 발생하는 조합원 미분양분 등을 광주도시공사가 매입하는 방안 등을 담게 된다.

또 광주시로부터 위임을 받은 형태로 광주도시공사를 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자'로 명시하고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과정을 거쳐 광주U대회 지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공공관리자를 지정할 수 없으나 협약을 통해 광주도시공사가 그러한 자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라며 "이번 3자 협약을 끝으로 사실상 사전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이달 말까지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마치면 오는 10월부터 철거공사, 내년 4월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또 화정주공아파트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세입자 이주대책도 별도로 수립했다. 맞춤형 임대주택 300세대를 매입해 1차적으로 화정주공아파트 내 영세 세입자 190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LH공사 등과 협의해 국민임대주택 미분양 물량을 이주자 및 세입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